

2024.01.23. No.2

통상 이슈브리프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정아 수석연구원(02-6000-5954, ja.lee@kita.or.kr)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前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 관련 그의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
 - 트럼프 캠프의 'Agenda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Project 2025'를 통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 미국의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중국 규제가 강화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전망

I 배경

- '24.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前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 2020년에 이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할 전망
 - 트럼프 前대통령은 고정 지지층(약40%)과 높은 인지도로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평가되나¹⁾, 최근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의 상승세로 변수 존재
 - 더불어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서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트럼프 前대통령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트럼프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연방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
 - * 여론조사에 따르면 54%는 트럼프 前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찬성한 반면 46%는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²⁾

1) 통상지원센터(2023.12.),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2024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통상리포트 제12호, 한국무역협회.

2) 이승호(2024.1.8.), “‘트럼프 후보 자격 있냐’에 미국인 54% ‘있다’, ‘46%’없다”, 중앙일보.

- 아직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이나 트럼프 前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 관련 그의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
 - 아래에서는 트럼프 캠프의 ‘Agenda 47’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 중 통상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함
 -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의 64%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중요³⁾
 - Project 2025보고서는 ‘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수 성향의 50여 개 단체와 3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II 주요 내용

1. 아젠다47 주요 내용

(1) 무역 및 경제 관련 공약

- 미국의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그린뉴딜 정책 폐지, ▲대중국 규제강화 등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제시

1)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 미국 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관세 정책을 제정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상하는 한편 외국 생산자에 관세를 부과
 - 트럼프 캠프는 보편적 기본 관세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실질적 가계 소득 및 GDP증가, 국내 제조업 생산량 확대, 수천억 달러의 정부 수입 창출 등을 기대⁴⁾
-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적용되며 FTA체약국의 적용 여부, 관세율, 부과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10%의 관세율을 제시⁵⁾
 - 라이트하이저 前USTR 대표는 보편적 기본 관세는 기존에 수입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에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⁶⁾
-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부과

2)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강화하여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국이 미국상품에

3) The Heritage Foundation(2018.1.23.), “Trump Administration Embraces Heritage Foundation Policy Recommendations”, The Heritage Foundation.

4) Trump Agenda47(2023.7.20.), “Rescuing America’s Auto Industry from Joe Biden’s Disastrous Job-Killing Policies”, Trump Camp.

5) Fox business(2023.8.18.), “Trump reveals why he wants a matching tax on trade”, Fox News Radio Live Channel.

6) Charlie Savage, Jonathan Swan and Maggie Haberman(2023.12.26.), “A New Tax on Imports and a Split From China: Trump’s 2025 Trade Agenda”, Newyork Times.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의 수입 상품에 부과⁷⁾

- 트럼프 前대통령은 농산물, 유제품, 강철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 적자가 감소하고 미국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

3) 미국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바이든 정책 폐지 및 완화

- 트럼프 前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의 규제들을 철폐·완화할 것을 공약⁸⁾
- 특히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상실되는 등 자동차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
 - ▲그린딜 정책 폐기, ▲바이든 정부의 기업 평균 연비규제(CAFE) 종료, ▲캐나다·멕시코에 USMCA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특별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철폐 등을 공약
- 그동안 트럼프 前대통령이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 왔고⁹⁾,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밝히며 IRA 백지화도 언급¹⁰⁾

4)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 및 대중국 견제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 주장하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공약¹¹⁾
 - 2022년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9,481억 달러)의 무역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는 3,829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¹²⁾
- 트럼프 前대통령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위해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의료용품, 국가 자산 등 미국의 모든 핵심 인프라를 중국이 소유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¹³⁾
 -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중국산 필수품 수입(우회수입 포함)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 금지 등을 공약

(2)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공약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7) Trump Agenda47(2023.6.21.),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Rescuing America's Auto Industry from Joe Biden's Disastrous Job-killing Policies", Trump Camp.

8) Trump Agenda47(2023.4.16.), "Liberating America from Biden's Regulatory Onslaught", Trump Camp.

9) Ana Swanson(2023.2.7.), "America's Trade Deficit Surged in 2022, Nearing \$1 Trillion", Newyork Times.

10) Jamie Smyth and Aime Williams(2023.11.23.), "Donald Trump would gut Joe Biden's landmark IRA climate law if elected", Financial Times.

11) Trump Agenda47(2023.2.27.), "President Trump's New Trade Pla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Trump Camp.

12) Ana Swanson(2023.2.7.). 앞의 주 9.

13) Trump Agenda47(2023.1.18.), "President Trump will stop China from owning America", Trump Camp.

에너지 및 전기를 확보할 것을 공약

1)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한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

- 트럼프 前대통령은 제조업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 바이든 정부의 반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식품, 원자재, 운송, 건설, 제조 등 모든 분야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미국 경제 및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비용 에너지 및 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 환경 의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공약
 -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 및 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새 파이프라인 구축을 추진
-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투자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

2)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 및 脫탄소 협력 등 기후 대응정책 철회

-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철회하여 대중국 의존 종식
 -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광물 채굴규제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70%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10%만을 차지¹⁴⁾
- 재집권 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할 것을 공약

<트럼프 前대통령의 통상분야 공약>

공약		내용
무역·경제	보편적 관세 도입	•모든 수입상품에 약10%의 관세를 부과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상품에 부과
	바이든 정책 폐지·완화	•▲그린딜 정책 폐기, ▲바이든 정부의 기업 평균 연비규제(CAFE) 종료, ▲캐나다·멕시코에 USMCA 하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특별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철폐 등
	대중국 정책	•중국에 대한 의존도 종식 및 대중국 견제 강화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중국산 필수품 수입중단을 위한 4개년 계획 도입,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 금지 등
에너지·환경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바이든의 환경 의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 및 가속화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전기차·기후정책 철회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협정 탈퇴

자료: Trump Agenda47

14) Trump Agenda47(2023.9.7.). "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 Trump Camp.

2. 프로젝트 2025 주요 정책 제언

(1) 무역 및 경제 관련 제언

□ 중국을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을 위협하는 ‘전체주의의 적’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경제·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

-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수출통제 대상 상품 확대, 예외·허가 기준 축소 등 EAR정책 강화, ▲대중국 첩보 역량 강화를 위한 Five Eyes 국가들 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동맹 구축·지원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장려, ▲중국의 개도국 영향력을 막기 위한 개도국 지원 공조 등¹⁵⁾

□ 미국의 경제·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역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을 제시

- WTO체제에서 불공정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을 약화시켰다고 평가
 -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로 모든 국가에 낮은 관세가 적용됨으로써 미국과 상호 불균형적인 관세율 발생*
 - *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인 반면 EU는 10%, 중국은 15%, 브라질은 35%. 쌀의 경우 미국의 관세는 6.2%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40%의 종가관세 부과 등
 - 무역적자로 제조 및 방위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 감소
-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무역법을 제안
 - 미국과 132개 무역파트너 국가의 관세가 상응한 수준일 경우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35만~3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 무역상대국들이 미국의 관세 수준으로 관세 인하 시 미국의 무역적자는 \$58.3억, 9.4%감소, 미국이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 인상 시 무역적자는 \$63.6억, 10.2%감소
- 국경세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
 - 국경세조정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관세적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 무역 의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여 중국으로부터 경제·재정·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제언

- 중국은 고관세·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착취, 덤핑, 위조, 지재권 침해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
 - ▲의약품 등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및 관세율 인상, ▲인쇼어링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중국산 상품에 대한 최소관세 면제(\$800) 중단, ▲중국 국영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계약 금지, ▲국가안보 상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소 및 단절 등

□ 국가 경제와 외교관계를 위해 관세 완화 및 철회, 중국과의 무역 원활화 등 상반된 의견도 제시

- 관세 확대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는 미국 경제를 더

¹⁵⁾ Kevin Roberts, et al.(2023), “Mandate for Leadership”, The Heritage Foundation.

불안정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

- ▲관세 완화를 통해 공급망 강화, 제조업 활성화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 ▲ 232조 및 301조 관세 폐지, ▲불필요한 무역 규제 폐지, ▲WTO 분쟁해결절차의 회복·대체, ▲WTO개혁·민주주의 국가로 제한된 후속 기구 설립, ▲TPP 재가입,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무역 쟁점만 다루는 IPEF 도모 등

(2) 에너지·환경 관련 제언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이며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에너지 위기는 자원 부족이 아닌 과도한 녹색정책 때문이라고 지적
 - 에너지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성장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미국의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므로 에너지는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의 요체
- 환경·기후 대응 전략 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제시
 - ▲친환경·탈탄소 보조금 축소, ▲민간분야 에너지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 개입중단, ▲민간 원전 개발·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 규제 요건 및 면허 절차 간소화, ▲핵심 광물 공급원 개발을 위한 가공 확대, ▲에너지시추 지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 허가 요건 완화 등

□ 특정 기업 및 에너지자원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 축소

- 에너지자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투자자 및 특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수천억 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폐지
 -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II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기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 지원 철회¹⁶⁾

III 평가 및 시사점

□ 미국 유권자의 39%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를 지목하고, 83%는 지지 후보 결정 시 “경제”가 중요하다고 답변(’23.10월)¹⁷⁾

-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성과를 강조하고, 트럼프 前대통령이 바이든의 경제 실책을 공격하는 것도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
 - 트럼프 前대통령은 공약에서 USMCA체결, 한미FTA 개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강조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회복 등으로 실업률(6.3%→3.9%)과 인플레이

16) Poject 2025보고서의 “Department of Energy and Related Commissions(Benard McNamee)” 부분 참고. Kevin Roberts, et al.(2023), 앞의 주.

17) Elena Mejia, Jennah Haque and Denise Lu(2023.10.27.), “How 2024 Swing-State voters feel about the US economy-In 10 Charts”, Bloomberg.

이션이 감소(9%→3.2%)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유권자의 49%는 바이든노믹스에 대해 회의적이고 미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책임자로 트럼프를 선호(바이든35%, 트럼프 49%)¹⁸⁾

□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 트럼프 前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및 상응 관세 도입을 공약하고, 공화당 역시 상호무역법 및 국경세조정을 제안하고 있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될 전망
 - 트럼프 캠프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 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
 - 한편,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시 미국 소비자의 세금 인상(\$3,000억 이상), 미국 경제 하락(1.1%), 일자리 상실(82만5,000개)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¹⁹⁾
- WTO체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 커짐
 - 공화당이 WTO 불공정 무역과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하는 WTO의 개혁을 제안
- 트럼프 前대통령과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
 - IRA 등 녹색 보조금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한²⁰⁾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가피

□ 트럼프 前대통령 재집권시 ‘스케줄F’ 행정명령 재발동을 공언함에 따라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

- ‘스케줄F’^{*}는 트럼프의 국정 기조에 반대하는 진보적 성향의 공무원들을 분류하여 충성과 인사들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스케줄F 공무원들은 상시 해고 가능
 - * 2020년 트럼프 前대통령은 스케줄F 행정명령(13957호)을 발동한 바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해당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²¹⁾

18) 앞의 주.

19) WSJ(2023.9.6.), “Trump’s Real Trade Record”, opinion, WSJ.

20) 이태성(2023.8.24.), “미국 투자 전세계 1위”, 머니투데이.

21) Anthony Zurcher(2023.11.3.), “What a Donald Trump second term would look like”, BBC.